

과학기술인 연금 받는 시대 오나

글 | 구남평 _ 디지털타임즈 기자 flint@dt.co.kr

과학기술의 인력수급과 양성 못지않게 과학기술인의 복지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인의 퇴직 후 복지 문제는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중심이 돼

지난 2004년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의욕적으로 출범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사업의 여건과 전망,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 2004년 11월 4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가 공식 출범했기 때문이다. 공제회는 과학기술인의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체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과학기술인도 퇴직 후 공무원들처럼 연봉의 상당액을 연금으로 받으면서 윤택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뜻 깊은 자리인 만큼 행사에는 과학기술부 장관,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장, 국회의원, 전직 과학기술부 장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연연 기초·공공·산업 연구회 이사장과 출연연 소속 원장 등 국내 과학기술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출범식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30개 출연연이 공제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12개 기관도 공제회 가입 의향서를 체결했다. 마치 과학기술인의 노후가 곧바로 보장되는

듯했다.

지지부진한 퇴직연금 사업

공제회 출범 3년차를 맞는 지금은 어떨까? 일단 겉모습은 괜찮아 보인다. 대부분 출연연이 공제회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공제회에 따르면 2006년 7월까지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관은 모두 52개

기관이다. 가입기관을 분류해보면 출연연이 24곳으로 가장 많고 특정연구소가 4곳, 민간기업이 6곳, 기타 18곳 등이다.

전체 가입자 수는 모두 4천474명이다. 누적 금액도 155억 원 가량 된다. 국방과학연구소가 698명이 가입해 가장 많았고, 기상청(599명), 원자력연구소(393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293명), 포항 산업과학연구원(225명), 표준과학연구원(210명) 등 순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과학기술인의 퇴직연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52개 기관 가운데 2개 기관만이 퇴직연금사업에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공제회의 주요 사업에는 퇴직연금사업과 적립형 공제사업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기관이 '연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적립형 공제사업에 가입돼 있다. 적립형 공제사업은 국가에 기여한 직업군에 설립을 허가한 공제회가 운영하는 일종의 적금으로 시중 은행보다 이자율이 다소 높은 것이 특징이다.

5%부담금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

그러면 이들은 왜 퇴직연금사업을 외면하고 적립형 공제사업에만 가입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부담금 때문이다. 당초 공제회는 퇴직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원(과학자)들의 퇴직적립금(8.3%)에 사용자인 출연연이나 정부가 일정비율로 부담금(5%)을 적립하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출연연이나 정부가 적립하기로 한 부담금 5%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출연연에서는 당초 잉여재원을 통해 5%의 부담금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성과금을 놓고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부도 난감한 표정이다.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책으로



공제회를 출범시켰지만 3년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는 현재 기획예산처에 관련 예산을 상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형평성을 이유로 집행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확보는 요원하다는 것이 출연연의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공제회에서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기존 5% 대신 출연연이나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2.5%로 낮추고 회원들이 2.5%를 부담하는 안이다. 일종의 타협안인 셈이다. 과기부는 이런 제안을 마련해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당초 출연연에서 잉여재원을 마련해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기획예산처와 노동부를 통해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지지부진한 퇴직연금사업에 대해 연구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5%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공제회의 퇴직연금사업에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5%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금사업은 일반 금융권보다 이자가 약간 높은 적금일 뿐이다. 특히 나이가 많은 연구원일수록 연금에 대한 매력은 줄어든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앞으로도 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제회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 막막한 연구현장의 현실

과학기술계 출연연 연구원들이 꾸준히 퇴직연금사업을 요구해 온 것은 무엇보다도 불안한 미래 때문이다. 출연연 연구원 중에서는 실제로 노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부지기수다.

가장 큰 원인은 IMF 금융위기 이후 전 출연연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들 수 있다. 현재 출연연에 근무하는 고참급 연구원들은 대부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 1억 원 이상도 있었지만 대부분 수천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7~8년이 지난 지금 이 자금을 노후 대책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 펀드로 받은 탓에 ‘제대로 된’ 재테크를 할 수 없었다. 과학자들의 재테크에 대한 ‘무지’도 한몫했다. 때문에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 심지어 ‘상투’ 수준이었던 주식에 투자해 빈털터리가 된 과학자들도 꽤 있다. 과학자들의 대규모 주식투자 실패 기사가 언론에 오르내렸던 것도 이 때였다.



실제로 모 출연연을 지난해 퇴직한 A 박사는 친구의 권유로 1억 원 가량을 주식투자에 나섰다. 2000년 이후 폭락한 주식 때문에 원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그는 현재 연구원을 퇴직한 후 연구원 시절의 절반도 안 되는 보수를 받으면서 생계비를 벌고 있다.

과학계 현장에서는 공제회 활성화 논의가 이런 인사들을 구제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국가에 헌신한 과학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금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은 다른 직종의 사람보다 평생을 과학기술 한 우물을 판 과학자들에게 절실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범정부차원 결정 내려야 할 때

공제회가 퇴직연금사업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최소 1천억 원 가량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과학기술계의 의견이다. 반면 출연연의 협의체 성격인 공제회로서는 그 같은 거액을 모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과학기술부가 단독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도 없는 구도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와 노동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차세대 국가성장 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는 뜻이다.

공제회에 굶직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거나 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과학기술국채나 과학기술 관련 기금을 통한 재원마련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과학기술인은 군인이나 공무원, 교원 등에 적용되고 있는 연금이나 공제회 혜택의 사각지대였다”면서 “진정한 과기인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결정이 내려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㉔